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7월

## “선진국 농정 통해 우리 농업 방향 모색”

###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정책토론회 7월 23일 개최



우리 농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 토론회를 7월 23일 개최했다.

연구원은 7월 23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세계농정의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농촌진흥청 청장, 서승진 산림청 청장,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이우재 한국마사회 회장 등 450여 명의 농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개방화, 경쟁력 제고, 고령화 등은 우리나라 농업·농촌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며, 선진국들도 주요 농정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농정에 대한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해 우리 농정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당부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고 농정이 나아갈 방향을 농업인단체, 정부, 연구기관, 정

부, 학계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우리 농정의 비전과 패러다임 모색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업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으로 바라보며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을 찾자”고 당부했다. 이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농업·농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인 최세균 선임연구원은 ‘세계 농정의 흐름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지역주의와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농촌은 삶의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국의 주요 농정현황을 설명하며 “농업의 식량공급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환경 및 식품안전, 농촌지역개발 등

에 대한 기능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변화를 수용하여 농정을 전환시켜 나가되 우리 농업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제변화 수용, 현실 반영된 정책 개발

송미령 연구원은 ‘선진국의 농촌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 연구원은 “농업정책에 비해 농촌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농업·농촌·환경 이슈가 다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지현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식품 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농정대상에 식품안전, 식품영양을 포함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농림부가 ‘식품’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응하여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농촌 식품부(가칭)’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률 연구원의 사회로 김재수 농업연수원장이 미국 농정에 대해, 김종철 농림부 정주지원과장이 EU의 농정에 대해, 김홍우 식물검역연구소장이 일본 농정에 대해, 이현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이 우리나라 농정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하였다. 지정토론에는 박현철 농림부 국장, 사공용 서강대 교수, 오내원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윤원근 협성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태호 서울대 교수, 전기환 전남 사무총장,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홍준근 농단협 사무총장이 참여하였다.

# 농업관측사업, “위성정보 활용 검토”



위성정보의 농업관측 활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7월 30일 개최했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농업관측사업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7월 30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 개최식에서 김정호 부원장은 “1996년에 5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업관측사업은 최근 28개 품목으로 늘어나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하며, “농업관측 수집정보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위성정보의 활용을 검토하고자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심도있는 토론을 당부했다.

김명환 농업관측정보센터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권오복 연구위원은 ‘위성정보를 활용한 관측사업의 타당성 추진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농업통계 작성은 물론 농업관측과 각종 병충해의 조기 경보 등의 광범위한 목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 1차 산업분야에서 위성정보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고 소개했다. “현재는 산림청, 수산관측센터,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한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농업관측에 위성정보를 활용할 경우 관측정보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고 연간 3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관측사업의 혁신을 위해 위성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위성

사진을 확보하고 관측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회에서는 농업부문 위성사진 관측기술에 대해 농촌진흥청 홍석영 박사, 수산관측 사례에 대해서는 BnT 솔루션 민병걸 이사, 위성체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해 한국해양연구원 양찬수 박사, 위성사진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건국대 김성준 교수가 의견을 밝혔다.

## 전자도서관 이용시스템 대폭 개선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개편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은 이용자들이 자료실에 문의하던 내용을 온라인으로 정리하고, 전자도서관과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편한 정보이용교육시스템은 이용자가 실제 검색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해 검색이 용이하다.

전자도서관 이용시스템 개편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도서관의 주요 기능인 정보검색 및 조회, 외부 문헌 복사 및 도서구입 신청, 과제별 정보검색 등이며 협약기관 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번 개편이 전자도서관 이용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원 직원들이 정보이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특히 신입직원들을 위한 정보이용 교육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책임자급 혁신리더십 워크숍 개최



연구책임자급 35명을 대상으로 혁신리더십 워크숍을 7월 6일 가졌다.

연구원은 7월 6일(금)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위원 등 연구책임자급 32명을 대상으로 혁신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서울 중랑동 소재 ‘홀리데이인 성북’에서 실시된 이날 워크숍은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간에 걸쳐 강의와 토론,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시간은 ‘변화관리 리더십’을 주제로 전 GE코리아 상무출신이자 변화관리 전문가인 방기택 HR파트너스 대표가 3시간 동안 강의와 토론으로 진

행하였다. 이어 ‘프로젝트리더십’을 주제로 20여 년간 삼성SDS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했던 (주)이위더스의 박종성 부사장이 강의했다. 강의와 토론을 마치고 진행된 만찬과 종합토론은 2시간 내내 경영혁신과 변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진솔한

발언과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최정섭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연구원의 리더그룹인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이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자기변화와 함께 조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연구원은 앞으로도 계층별로 변화관리와 리더십에 대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정의 전환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기술의 진보는 인류를 부족의 시대에서 과잉의 시대로 인도하였다. 식량부족 문제만큼 인류가 풀기 어려운 숙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지역적으로 분배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식량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

##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안전성과 품질

1950~60년대의 산업 발전은 식량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두드러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던 곡물 수요는 소련이 자급자족 정책에서 벗어나 곡물을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폭발하였다. 곡물 공급 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가격지정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해 공급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유럽과 미국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국내외에서 찾기 시작하였다. 유럽과 미국은 모두 지지가격을 낮추고 해외시장 개척을 시도하였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UR)를 출범시키고 거기에 농산물 분야를 끼워 넣은 것이다. 최근 바이오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국제 곡물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아직도 공급 과잉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품질이다.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 안전성, 맛, 영양, 포장상태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안전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데에 기여한 것

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공급 능력의 향상이외에 유럽의 광우병 발생도 한 몫 하였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광우병이 발생하자 농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한 것에 대한 보답이 위험한 식품의 공급으로 돌아온 데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광우병 발생은 유럽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농정 방향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질병과 유해 식품에 의한 사고의 빈발도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특히 품질이 낮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소비자들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급 과잉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비자들에 의해 선택되는 농산물을 공급해야만 한다.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 국민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시


농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경관 및 환경 보전, 농촌의 활력 유지를 통한 문화의 보전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부르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등에서도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여 무역자유화 논의에서 특별히 고려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

능 확충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경관 및 농지 보전을 조건으로 한 직접지불제, 농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의 90%가 농촌의 공익적 가치(사회, 문화, 환경 등)를 인정하고 있으며, 53%는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정에 소비자와 국민경제적 시각 반영해야

세계 농정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민의 소득지지라는 농업·농민 중심에서 식품안전, 환경, 농촌 등으로 대상이 확대·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농업 담당 부처의 명칭에 식품 또는 소비자가 들어가지도 하고 농업법안에 농촌,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공동농업정책에 농촌개발규정을 명시(1999년)하고 있는 것이나, 일본이 '새로운 식료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1992년)'에 식품과 농촌을 담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농정은 생산성 향상과 소득지지라는 농업·농민에 대한 전통적인 목표를 유지하면서 식품안전과 영양 공급이라는 소비자 중심적 사고와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국민경제적 시각을 점차 중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축소될 수 있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와 상충되는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농업정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국민경제적 시각에서의 농촌정책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러한 상충성을 해결하고 농민, 소비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다. 



## 농산물 유통분야의 새로운 혁명, 전자태그 기술

김재환 전문연구원

금년 7월 1일부로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이용되는 스티커를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로 교체하였다. 이를 후 농림부는 정통부와 함께 『u-농업·농촌정보화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일부 매장에서 전자태그 기술을 이용한 생산이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전자태그 기술이 타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계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전자태그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소개하기로 한다.

### 전자태그, 농업분야에 유용하게 활용

무선전파로 작동하는 전자태그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가진 기술체계이다. 무선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고, 일일이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 불편함도 없다. 전자태그 기술은 전 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실례로 미국의 월마트에서는 재고 등 물류관리에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전자태그의 유용성은 농업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농산물 생산이력시스템 구축에도 유용하지만 물류와 저장분야에서의 활용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전자태그 기술을 활용하면 매장과 창고에 몇 개의 물품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주문을 확인하고, 생산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저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농산물의 변질과 부패에 따른 가격변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전자태그 기술은 농산물 물류와 저장분야에서 실시간 물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한다.

### 농산물 유통분야에 전자태그 정보 적용

전자태그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물류정보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활용될 수 있다. 시장과 기상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출하는 도매시장 가격의 폭등락을 유발하는 대표적 농산물 물류현상으로 지금까지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주산지과 물류거점 그리고 도매시장 등의 주요 출하·반입지에 전자태그 리더기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물류현황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실시간 물류정보는 생산자, 유통업자에게 적절한 출하의사결정을 도와주고, 홍수출하와 같은 극단적인 물류현상을 방지하여 가격 폭등락을 방지할 수 있다.

농산물 저장환경정보를 전자태그는 제공할 수 있다. 농업관측과정에서 가장 파악하기 힘든 분야가 저장농산물의 품질과 물량 그리고 반출시점에 대한 정보이다. 능동형 전자태그를 활용한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를 구축하게 되면, 저장·출하물량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에 대한 정보도 수집·제공할 수 있고 물량정보 외에 저장된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생산자, 유통업자가 저장기간과 출하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가격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자태그 기술은 수입농산물의 유통구조 분석과 부정유통 방지에 효과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입쌀이 어디에서 어디로 유통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렇지만 포장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주요 소비지와 유통지점에 전자태그 리더기를 설치하여 물류정보를 수집한다면 손쉽게 유통구조를 분석하고 부정유통을 감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지에 해당하는 특정 미곡처리장으로 수입쌀 물류이동이 확인된다면 이는 수입농산물 부정유통을 예상할 수 있는 기초정보인 셈이다.

### 품목별 물류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농림부와 정통부는 2007년부터 『u-농업·농촌정보화협력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IT신기술 선도사업을 통해 전자태그 기술을 실현해가고 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2008년 전후로 품목별 물류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값비싼 전자태그 칩 단가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백 원에서 수십 원대로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물류분야의 전자태그 응용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것이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전자태그 기술은 범용화될 것이며, 지금까지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많은 기술적 진보가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실현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전자태그 사업은 개별사업 측면이 아닌 전국 단위 농산물 물류유통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유통업자가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시장 환경에 적합한 정보활용전략이 어떻게 수립되는가도 향후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정부와 학계는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투자 외에 농산물 물류정보 활용에 대한 연구투자를 병행하고, 관련 물류 유통 전략수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R**

# 한·EU FTA 2차 협상 결과와 향후 협상 전략

어 명 근 선임연구원

한·EU FTA 2차 협상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EU 대표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상에 앞서 양측은 상품 분야의 양허안 초안을 교환하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향후 양허협상 진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농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생 및 검역(SPS)과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협정문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EU의 상품 양허 초안은 즉시 및 3년 이내의 조기 철폐 품목이 전체의 95%, 교역액 기준 80%에 이르며, 자동차와 LCD-TV, 그리고 일부 농산물 등 나머지 모든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도 7년 이내에 완전 철폐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미 FTA 타결안에서 조기 철폐 비율이 93%에 달한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인 동시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농산물 양허수준 미국과의 FTA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제출한 양허 초안은 조기 철폐 품목이 전체의 80%, 교역액 기준으로는 60% 수준이며, 기계, 화학, 가죽제품 등 상당 수 품목은 10년 내 철폐로 분류하였다. 또한 돼지고기 등 농산물 20여 개는 10년 이상 철폐로 양허하고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삼겹살과 닭다리 등 농산물 205개는 관세 철폐 기간이나 방식 등을 명시하지 않은 미정(undefined)으로 분류하여 전반적으로 EU보다 개방 폭이 낮은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양허안은 지난 5월 개최된 1차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비해 크게 후퇴한 수준은 아니다. 전체 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10년간 95% 철폐

원칙에 거의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EU의 적극적인 개방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차 협상 당시 EU와 함께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하여 신속적인 양허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던 분위기를 고려하여 농산물 양허안을 미국과의 FTA보다 낮게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 양허안 개방 수준 낮은 것으로 평가

2차 협상에서 EU측은 우리나라 양허안의 개방 수준이 너무 낮다고 평가하고 미국과의 FTA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취급을 다소 인정할 수 있지만 가능한 최소화하고, 양허초안에서 미정으로 분류한 품목의 양허 형태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돼지고기와 토마토 가공품, 체리, 포도주, 맥주, 위스키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EU의 주장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1차 협상 이전부터 EU가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허용할지라도, 주력 수출품목인 와인, 위스키, 낙농품 등 가공농산물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관세 철폐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회의시작 직후부터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로 협상 분위기가 경직된 2차 협상은 협상 막바지에는 우리측의 농산물 양허안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과 각종 요구 사항이 토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통상 협상이란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행해지는 흥정과 같아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노정되었다고 협상 결렬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호 이득의 극대화라는 통상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신뢰를 유지하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농산물 양허초안에서 쌀 관련 품목을 '예외'로 분류한 데 대해 EU측은 특별한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미정'이라는 애매한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205개나 되는 품목을 포함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미국에 양허한 품목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양허 보류함으로써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비친 셈이다.

## 3차 협상, 품목에 따른 분류 작업 필요

9월로 예정된 3차 협상에 대비한 수정 양허안은 무엇보다 205개 '미정' 품목들을 국내 수급 상황과 EU산과의 경쟁력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EU의 관심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세 철폐 가능성을 검토하는 '요구-제안(Request-Offer)' 방식으로 추진하되 수출 보조를 받는 품목 등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양허 예외'나 '장기간 인허' 등으로 양허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EU 회원국들의 농업 특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아울러 FTA는 양자간 협정이므로 다른 국가와 체결한 협정은 구속력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미국에 양허한 수준대로 EU에도 양허할 의무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동등 수준의 양허를 통해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

# EU, 동물복지 개념의 확대와 의의

김태곤 연구위원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EU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해프닝이 있었다. 한국 측 일부 언론에서 보신탕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해석한 것에 대해 EU는 규제차원이 아니라 동물복지에 관한 세미나 개최나 전문가 교류 등 교육강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 동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시

동물복지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동물의 고통을 최대한 억제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동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의미이다. 인간의 동물 이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동물애호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동물권리(animal rights)와는 다른 개념이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살해하는 것은 인정하되, 살아있는 동안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정동물의 복지는 물론이고, 가축동물, 전사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까지도 포함한다.

가축의 경우, 사육밀도를 제한하여 자연에 가까운 넓은 토지에서 방목하거나, 항생제 투여를 제한하여 유기축산농법을 도입하는 등 식품 안정성과도 연계된다. 실험동물의 경우, EU는 감소(reduction), 세련(refinement), 대용(replacement) 등 3R을 연구자가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동물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놀이도구를 제공하고, 동물 본래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건축물도 도입한다.

EU가 동물복지에 정책적으로 개입한 역사는 깊다. 1974년의 '동물도축에 관한 규칙'을 시작으로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1998년 '농장단계의 가축보호에 관한 일반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기아, 고통, 상처·질병, 통상적인 행동제한, 불안, 스트레스' 등 동물복지에 반하는 5대 항목으로부터의 해방원칙을 확립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소, 돼지, 산란계 등 축종별 사육에 관한 최저조건을 규정한 이사회지령이 있다. 1999년 EU 헌법에 상당하는 '암스테르담조약'에서는 동물을 '감수성이 있는 생명체'로 정의하고, EU나 가맹국이 제도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역내시민의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2006년 1월에는 '2006~10년까지 5년간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동물복지에 관한 주요 활동을 규정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복지 최저기준 강화, 동물복지분야의 연구 및 실험에서 3R 원칙 촉진, 동물복지에 관한 표시규격화 도입, 가축 사용자 및 일반국민에 대한 동물복지에 관한 정보공유 및 제공

촉진, EU의 국제사회 동물복지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 유지 등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직불제 수급을 위한 이행 조건에 동물복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동물복지의 철저한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동물복지의 확산을 위해 EU는 농장, 수송, 도축 등 단계별 기준설정에 관한 법령정비와 가맹국에 대한 준수촉진 등을 담당하고, 가맹국은 국내법 정비와 준수여부의 감독활동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EU의 동물복지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70% 이상이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한 농가에 대해 재정지원을 지지하고, EU로의 수입 동물복지제품에 대해서도 90% 정도가 EU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는 윤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동물복지를 준수한 제품이 건강에도 좋고 품질도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상품 선택을 통해 동물복지 개선에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동물복지규정을 준수하여 생산한 축산물이나 제품은 보다 비싼 가격이라도 구입한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동물복지를 준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로고마크 사용, 등급 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도정비의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

EU는 그동안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나 캐나다와 칠레 등과의 FTA 협상에서 동물복지개념 도입을 요구하여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동물복지 개념은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EU의 축산환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EU는 대규모 초지와 방목지를 이용하는 '방목형' 축산인 반면, 우리나라는 농후사료에 의존 축사에 밀착하는 '축사형' 축산이다. 그러므로 FTA 협상시 축사형 축산의 동물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사육환경을 개량하면 생산비가 높아진다. 그러나 좁은 축사에서 과밀사육할 때보다 약제비는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동물복지가 고부가가치 실현

최근 영국에서는 좁은 양계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팔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사육한 돼지고기'라는 표기가 소비자나 유통업자의 관심을 끌고 있고, 미국의 맥도날드도 사육면적 등 독자적인 동물복지지침을 만들어 거래하는 생산자를 우대하고 있다.

동물복지는 이제 '가축을 위하고 인간을 위하는' 단계를 넘어 서서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제품이 국외에서 밀려온다면 국내 축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 7월의 농정 주요 동향

### 한·EU FTA 제2차 협상 동향과 쟁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실무협상의 주요 쟁점은 양허 수준, 위생 및 검역 조치(SPS), 원산지 기준 등이었다.

EU가 최장 7년 내에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와 쿼터를 전량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 미정품목 250개와 쌀 등 16개 품목의 개방 제외 등을 요청하였다. 미정품목에는 벨기에가 최대 수출국인 냉동 삼겹살 등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우리나라 양허안의 개방수준이 낮다는 점과 농산물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농산물의 예외적 인정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미정품목의 양허 유형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농업의 민감성과 양측의 농업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EU가 우리나라의 양허 수준 개선을 원할 경우 EU 역시 일부 공산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측은 상대국의 평가를 고려하여 제3차 협상에서 수정 양허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개별 품목에 대한 양허 수준은 논의하지 않았다.

위생 및 검역 조치에서 EU는 '동물복지' 개념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동물복지란 사육, 수송, 도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EU는 모든 FTA에서 이 개념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왔고, 칠레, 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 시 이를 반영한 사례가 있다. 다만 교역과 직접 관련은 없으며, 세미나 등을 통한 협력 증진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위생 및 검역에서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지역에만 검역을 강화하는 지역화 도입 여부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동물복지 및 지역화 인정 등에 대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신선농산물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생산·재배한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을 하는 완전 생산기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1차 협상에서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지리적 표시(GI)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EU FTA 제3차 협상은 오는 9월 중순 브뤼셀에서 개최되고,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 21일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국가와의 FTA 발효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품목을 대상으로 일정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국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반영한 것이다.

### OECD-FAO 농업전망 2007~2016 주요 내용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품 및 농업조직(FAO)은 보고서 'OECD-FAO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2007~2016'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곡물, 유지작물, 설탕, 축산물, 낙농품 등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전망을 제시하였다. EU의 25개국에서 27개국으로의 확대와 최근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 가정을 포함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세계 경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둔화된 인구 성장 등 세계 경제의 주요 특징들을 고려하였다.

보고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경제가 세계 경제 및 농업 시장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소득 증가와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비 OECD 국가들의 농산물 생산 및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의 높은 국제 곡물 가격은 가뭄에 의한 공급 부족과 낮은 재고량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바이오연료 원료로 사료의 사용 증가와 정책 개혁으로 인한 농산물 잉여 감소와 같은 구조 변화가 향후 10년간 농산물 가격을 과거의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연료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곡물, 유지작물, 설탕, 식물성 오일 등의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에서는 옥수수, EU에서는 밀과 평지씨, 브라질에서는 설탕이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주요 원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높은 국제 곡물 가격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입 개발도상국과 도시 빈민의 식량 부족 문제, '식량 대 연료'라는 논쟁 촉발을 지적하였다. 또한 높은 국제 사료곡물 가격은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이용되는 사료작물 생산자의 소득을 지지하나, 사료곡물을 이용하는 축산업자와 그 외 이용자에게는 더 높은 비용과 낮은 소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편 국제 농산물 시장 가격이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격 지지와는 다른 정책으로의 개혁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기술, 바이오연료 정책의 변화, 석유가격의 급속한 변화, 사료작물의 변화가 미래의 시장 상황을 급격히 바꿀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 연구원, 혁신수준 4단계 진입

우리 연구원이 2006년 혁신평가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드물게 혁신수준 4단계에 진입했다.

7월 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19개 공공기관 혁신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3단계 수준이었던 우리 연구원이 혁신 4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수준 1단계부터 6단계 중 4단계 의미는, 혁신의 제도화와 역량의 기반을 갖추고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혁신수준이 양호하다'는 평가라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연구원은 2006년 혁신전담팀 지정과 경영혁신위원회, 주니어보드 등 혁신조직을 확대 개편해 운영하면서 연구관리제도 개선, 연구자 멘토링제도 도입, 고객관계관리(CRM)구축, 제안제도 운영 등 연구품질 제고와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혁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연구원은 5개 평가영역 중 비전과 전략, 리더십, 혁신역량, 혁신성과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혁신제도화 분야에서만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원은 올해도 연구성과의 가치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농림기술관리센터 1사1촌 자매결연

농림기술관리센터는 7월 25일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 2리와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센터는 마을발전기금 및 기념품을 적성리 천성호 이장에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결연 협약을 계기로 센터는 앞으로 농번기 일손지원, 지역특산물 구매 및 홍보, 도서증정, 지역특산물 기술개발 촉진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측정보센터 자문회의 개최

쌀관측팀은 여름호 발간과 관련하여 7월 18일은 충북농업기술원, 19일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23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24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지역자문회의를 가졌다.

축산관측팀은 축산관측(육계) 8월호 발간과 관련한 중앙자문회의를 7월 20일 충북 진천에서 개최했다. 채소관측팀은 8월호 발간을 위한 중앙자문회의를 7월 26일 연구원에서 가졌다.

## 농경토론회 '여성농업인 노동 가치' 토론회

연구원은 7월 31일 중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업 노동 가치'란 제목으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강혜정 전문연구원은 "현재 농촌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 임금이 과소 평가되고 있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어 여성 농업인의 농업 노동가치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 김창길 박사 OECD 농합위 부의장 3選

김창길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산하 농업·환경정책위원회에서 6년째 선출직 부회장에 선출되어, 임기 2년(2007. 7~2009. 1)의 직임을 수행하게 되었다.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는 농업환경 분야에서 농업환

경지표 개발과 지표를 활용한 회원국의 농업환경 진단 및 친환경농업정책을 집행토록 회원국에게 권고하는 기구이다.

## 농림기술관리센터 혁신교육 실시

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는 7월 19일과 20일 센터 회의실에서 혁신워크숍을 가졌다. 첫날은 'R&D 개념의 바이오 연구'란 제목으로 오테광 박사가, 둘째날은 '국가과학기술평가체계와 현황(농림분야를 중심으로)'이란 제목으로 정희종 박사가 강의했다.

### 연구진 대외활동

△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7월 18일 성주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부 주최 신활력 사업·향토산업 육성사업 연찬회에서 '향토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김윤식 부연구위원은 7월 10일 북경에서 열린 태평양식량전망에서 '소매시장 변화에 대한 생산자 반응'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 연구원 인사

△ <신임>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 소장 신동현(7.16)

# 세계농촌사회학회 보나노 회장 내원



세계농촌사회학회 보나노 회장이 방문,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운영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농촌사회학회 회장인 알레산드로 보나노 샘휴스턴대 교수와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 프로그램위원장인 요시오 카와무라 류코쿠대 교수가 7월 24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정기환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조직위원장, 허 장 사무국장을 만나 12회 대회의 운영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최정섭 원장과 만찬을 함께 하며 대회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7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세계농촌사회학회가 주최하고, 우리 연구원과 한국농촌사회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제12회 세계농촌사회학대회의 기조연설자 선정, 세션 일정의 구성, 저개발국 학자에 대한 지원, 홍보계획 수립, 현장견학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고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특히 8월 중 미국과 중국,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미국, 아시아, 유럽 농촌사회학회에 참석하여 대회를 홍보하고, 참가를 독려하기로 하였다.